

전북자치도, 세출 고강도 구조조정

내년도 일반회계·수입 대비 지출 9000여억원 초과 외부 재원 조달 최소화 지속 가능 재정운용 도모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슬림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가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도의 세수 여건이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하면 지출 수요가 약 9,000억원 초과했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입 요구서를 기초로 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 3,20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분야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등 불필요한 업무 버거기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 성 사업은 설계, 보상, 시공 등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이월되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은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

의무복무 기간 6년 안채우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 121명

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경찰대 출신 92명 민주 한병도 의원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 안채우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



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12일 익산 북부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추석명절 민생물가를 살피며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다. 같은 날, 김관영 도지사가 임실 육군 35사단을 방문해 지난 7월 수해복구 대민지원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김광석 사단장과 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같은 날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비롯한 군부대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방문해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추석 앞두고 도민 생활 안정 도모

김관영 도지사, 전통시장·군부대·소방기관 현장 살피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2일 도내 각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도정의 방향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관영 지사는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익산 북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도민들의 경제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강령석 익산시 부시장과 익산 지역구 도의원들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을 구입하며, 도민들이 겪는 물가 부담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비롯한 군부대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방문해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군부대 및 소방기관 방문은 지역 내 피해가 컸던 수해 복구 현장과 올해 개최된 행사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도관 제35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장(중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 6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이 전달됐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 장병과 소방관들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며, "후원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군산 역전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해 강태창 의원(군산1), 김동구 의원(군산2), 박정희 의원(군산3)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쌀 과일 생선 등 다양한 농수산물들을 구입했으며, 구입한 물품은 군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특히, 행사에는 전북상인연합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군산 역전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군산시 부시장,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도 참석해, 상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승우 의장은 행사 현장에서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민주 이춘석 의원 "익산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1차년도 공사비 확보"



지지부진하던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순풍에 맞닿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차년도 공사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보행자, 승객 등 교통 참여자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업용 재직운전자의 체험교육 이수 전후 1년간 교통사고가 약 58.8% 감소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화성(수도권)과 상주(경북권)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전북 등 다른 지역 시민들은 교육받기가 힘들었다. 아울러 두 센터의 체험교육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해 신규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충청·전라권에 추가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2022년 국토부는 충청·전라권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건립부지를 공모했고, 익산시가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75억원, 2025년 개소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농지점용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착공도 순연됐다.

최근 익산시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립 사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30대 이하 NH농협 보이스포싱 피해 3년세 급증

민주 윤준병 의원 "청년층 대상 보이스포싱 예방 선제대응해야"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행을 이용하는 '30대 이하'의 보이스포싱 피해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경음·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보이스포싱 피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0대 이하 농협 이용객의 보이스포싱 피해 건수는 총 991건으로, 전년도 366건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가량 뛰었다. 피해 금액은 총 214억 1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농협 보이스포싱 전체 피해 금액의 24.4%를 차지했다. 2021년의 13%와 비교하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추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보이스포싱 피해액은 최근 3년간 2,21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이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피해액 대비 1.62%인 36억 3,320만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대부분의 예방 사업이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그쳐 현재 고도화된 금융사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포싱은 흔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알려졌으나, 이번 자료에서 보았듯이 보이스포싱에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30대 이하 청년층에게도 걸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사기 등의 보이스포싱을 저지르는 것은 반사회적 악질 범죄로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년층 대상 보이스포싱 예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국주영은 도의원, 아동청소년그룹홈협전북지부와 간담회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사)한 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일환)와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주영은 의원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임승식 위원장(더민주, 정읍1),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 박정규 의원(더민주, 임실)과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 김경 과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 김일환 지부장, 임정미 부지부장, 전주 포도원 그룹홈 김영길 대표, 군산 행복의 들서영희 시설장, 전주 건강한 가족 이주은 보육사, 전주 우리집 김미향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룹 홈 종사자 분들에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룹 홈 종사

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삼임위 의원님들과도 집행부서와 협의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 김일환 지부장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룹 홈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상기 근무자 선임 생활지도원 직책 부여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룹 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삼임위 의원들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